

EU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 포커스

- 유럽 순방 계기 벨기에·EU·이탈리아 정상회담 주요 성과
- 아일랜드, '26년 하반기 EU 이사회 순환 의장국 프로그램 발표(6.11)

□ 단신

- [CBAM] EU 이사회, CBAM 다운스트림·우회방지 강화 개정안 입장 채택(6.12)
- [배터리] EU, 역내 배터리셀 생산 확대 위해 'Battery Booster Facility' 도입
- [옴니버스] 소형 중견기업(SMC, small mid-cap) 대상 간소화 규정 합의(6.9)
- [디지털] EU, AI 생성 콘텐츠 표시·고지 행동강령 발표

- 무역관 행사 안내 *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웨비나(6.24)



주요 경제통상 일정

일정	내용
6.15(월)~18(목)	유럽의회 본회의 개최(AI 디지털 옴니버스 논의, 대미 관세 표결, 폐차 규정 표결 등)
6.18(목)~19(금)	EU 정상회의 개최(우크라이나 지원, 경쟁력 강화, 2028~2034 MFF, 국방·안보 논의)
6.22(월)	EU-몰도바 정상회담
6.24(수)	조세 제도(Taxation)·에너지 제품 법제화(Energy product legislation)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6.23(목)	EU 환경 이사회 개최(자동차 CO2 배출기준 논의, REACH 논의)
6.26(금)	EU 운송·통신·에너지 이사회 개최(그리드패키지, 2030년 이후 에너지 논의)
7.1(수)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및 방위 단일시장 통신문 발표, 유럽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 발표
7.15(수)	EU-ETS 개정안 발표, 에너지 패키지 발표(전기화 행동계획)
7.22(수)	에너지 패키지 발표(전기화 행동계획)



유럽 순방 계기 벨기에·EU·이탈리아 정상회담 주요 성과

- ◎ 한-벨기에, 수교 125주년 계기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반도체 협력 확대
- ◎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고위급 경제대화 신설 등 경제안보 협력 채널 강화
- ◎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첨단산업·공급망 협력 확대

□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 계기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벨기에 정상회담과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후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한-이탈리아 정상 회담을 진행
- 이번 순방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EU의 경제안보 강화 흐름 속에서 철강 수입 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업 관련 입법 등 EU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하고, 경제·통상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

□ 한-벨기에 정상회담

- 6.10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벨기에 정상회담에서는 수교 125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기반을 재확인하고, 중소기업·반도체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
- 양 정상은 한-EU FTA 발효 15년 차를 맞아 양국이 견고한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하고, 배터리 소재·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
- 이번 방문 계기 체결된 '중소기업·스타트업 발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로 함
- 또한 벨기에 소재 세계적 반도체 연구기관 아이맥(IMEC)에서 120여 명의 한국인 연구진이 나노·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중인 만큼, 향후 미래 반도체 기술 분야 협력 확대가 기대

□ 한-EU 정상회담

- ①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및 승객 예약자료(PNR) 전송 협정 타결로 안보 협력 강화**
 - 양측은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으며, 체결 시 EU와의 기밀정보 교류와 방산 산업 협력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승객 예약자료(PNR) 전송 협정 협상도 타결했으며, 발효 시 EU 국적 항공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승객의 예약자료를 활용해 마약, 총기,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 기반이 마련될 전망

②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

- 한-EU DTA는 전자계약·전자서명 법적 효력 인정,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컴퓨팅 설비·데이터 현지화 원칙적 금지, 소프트웨어 수출입·유통·판매 조건으로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
- 한국 기업은 EU 진출 시 현지 데이터센터 구축 부담을 줄이고, 전자상거래·디지털 콘텐츠 수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디지털 무역 참여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③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 추진 및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 합의

-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혁신 분야 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출범하고, 경제안보·무역·산업정책 협력을 위한 '한-EU 고위급 경제대화'를 신설하기로 함
- 한국 정부는 EU의 신규 철강 수입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산 철강의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 CBAM 검증기관에 한국 기관 포함, EU 산업가속화법(IAA) 관련 한국이 EU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양측은 AI 협력 문건 체결에 동의하고, 딥테크 스타트업 국제 진출 지원,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이후 첫 공동 연구과제 개시 등을 통해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또한 '고위급 에너지대화'를 출범시키고,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저탄소 기술, 순환경제, 제품·포장 지속가능성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함

□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협력 제도화

- 이재명 대통령은 6.11~12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했으며, 6.11일 로마에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함
- 양국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다자주의 존중 등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함
- 이어 6.12일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26~'30년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개발협력, 첨단 과학기술·ICT 협력, 사회연대경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등 4개 MOU를 교환

② 통상환경 개선과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확대

- 이탈리아는 신규 기계·설비 도입 시 세제 혜택 대상을 'EU산 유·무형 자산'으로 한정했던 초감가상각제도의 지역 제한을 폐지
- 이에 따라 한국산 기계·설비의 이탈리아 시장 진입 불확실성이 완화됐으며, 양측은 한국산 기계·설비가 이탈리아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
- 양측은 제조업 AI 전환, 반도체 소재·장비·첨단 패키징, 메모리·파운드리 기술, 전기차·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

• 자료 : 청와대(6.11), EU 집행위원회(6.10)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노효주(hyoju.no@kotra.or.kr)

아일랜드, '26년 하반기 EU 이사회 순환 의장국 프로그램 발표(6.11)

- ◎ 아일랜드, 키프로스에 이어 '26.7.1일부터 6개월간 이사회 순환 의장국 수행 예정
- ◎ 경쟁력과 EU 가치 강화, 안보 문제 대응을 핵심 기조로 '26년 하반기 EU 정책 추진 전망

□ 개요

- 아일랜드 헬렌 맥엔티 외교통상부 장관, 차기 이사회 의장국의 우선 과제 발표
 - 아일랜드는 트리오 의장국인 리투아니아·그리스 및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의,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6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정책 프로그램 발표

(참고) EU 이사회의 순환 의장국 및 트리오(Trio) 체계

EU 이사회는 1개 회원국이 6개월간 회의 주재 및 입법 조율을 맡는 순환 의장국제로 운영되며, 정책 연속성·일관성을 위해 연이어 의장국을 맡게 될 국가를 트리오로 묶어 18개월간 공동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을 추진

- 아일랜드는 이사회의 10개 정책 분야별 주요 의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 유럽 가치 수호, 안보 문제를 3대 핵심 기조로 강조
- 이 외, '26년 하반기 중 '28-'34년 차기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에 대한 합의와 영국·미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

□ 주요 내용

- EU의 경쟁력 강화
 - 아일랜드는 '26.4월 EU 입법기관이 합의한 단일시장 강화 로드맵 'One Europe, One Market'을 바탕으로 △규제 간소화, △단일시장 통합, △무역 정책 강화, △에너지 전환, △디지털·AI 분야 정책 추진 예정
 - 또한, 산업가속화법(IAA)의 연내 타결과 유럽 전력망 패키지 입법 완료를 비롯해 28 번째 법체계(EU Inc.), 저축투자연합, 반도체법 2.0, EU 제품법, 4대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디지털·환경·자동차·식품안전) 등 현재 추진 중인 구체적 법안 명시
 -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AI 분야에서 EU의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EU 입장을 개선하기 위해 임기 내 AI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
- EU의 가치 수호
 - 인권·자유·평등·법치주의 등 EU 조약에 명시된 기본 가치를 유럽 내부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입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하는 한편,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및 가짜 뉴스로부터 단일시장을 보호하고 민주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특히 유럽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연내 몬테네그로와의 가입 협상 완료를 비롯해 알바니아·몰도바·우크라이나와의 EU 확대 협상을 진전시킬 예정
 - 또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이행을 강화하고, 아동 성학대 방지 법안(CSAM) 입법 및 EU 차원의 디지털 성인 연령 기준 수립 및 관련 조치 도입 예정

○ 안보

- 러·우 사태, 중동 전쟁, 신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해 유럽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군사적 안보를 넘어 환경·경제·보건·식량 등 전방위적 영역으로 안보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EU 내부의 중대 조직범죄 근절과 국경 관리 정책 강화
- 이를 위해 차기 유럽 안보 전략을 출범시키고, 군사 장비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군사 기동성 규정, 방외 조달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이민·난민 협정 이행을 강화할 예정

<'26년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

분야	조치	목표
경쟁력	산업가속화법	연내 합의 완료
	EU 반도체법 2.0	협상 진행
	유럽제품법	'26.3분기 제안 예정
	28번째 법체계(EU Inc.)	연내 합의 완료
	유럽 전력망 패키지	연내 합의 완료
	에너지 안보 패키지	'26년 하반기 중 제안
	디지털 네트워크법	협상 진행
	클라우드·AI 개발법	'26년 하반기 중 제안
	바이오테크법	협상 진행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	규제 단순화 추진
	유럽 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	'26.3분기 제안 예정
	EU 우주법 & 우주서비스청 규정	협상 진행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관련 협상 진행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개정안	'26.3분기 제안
순환 경제법	'26.3분기 제안	
4대(디지털·환경·자동차·식품사료) 옴니버스 패키지	연내 합의 완료	
가치	아동 성학대방지(CSAM) 규정 및 지침	연내 합의 완료
	디지털 성인 연령 확인 조치	기술 표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유럽 민주주의 실드 이니셔티브	실무 조치 추진
	유럽 민주주의 회복력 센터	'26.2월 출범, 센터 역량 강화
	몬테네그로와의 EU 가입 협상	연내 협상 완료
안보	디지털 서비스법	이행 및 조사·감독 강화
	방위 조달 지침 개정	'26.3분기 제안 예정
	군사 기동성 규정	협상 진행
	이민 및 난민 협정	'26.6월 발효 후, 실질 이행 관리
	사이버 보안 패키지(NIS2, 사이버보안법, CRA)	협상 진행
핵심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 회복력 지침	회원국 핵심 인프라사업체 식별 및 조율	

자료 : 아일랜드 의장국 프로그램, One Europe, One Market 로드맵, 현지 언론 바탕으로 작성

□ 향후 전망

- '28-'34년도 EU 예산에 대한 회원국 간의 견해차로 차기 다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이사회 입장 조율에 난항 전망
- 한편 아일랜드가 디지털·기술 분야에서 EU 주권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회의론 대두
 - 아일랜드는 구글·메타 등 빅테크 본사 소재지임에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DSA 등 EU 디지털 규제에 대해 아일랜드 당국의 준수·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옴
 - 이로 인해 '26년 하반기 추진될 디지털 옴니버스를 비롯한 디지털·AI·사이버 보안 입법 및 조율 과정에서 아일랜드가 EU의 기술 주권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 제기

• 자료 : 아일랜드 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6.11)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윤윙희(uno@kotra.or.kr)

□ [CBAM] EU 이사회, CBAM 다운스트림·우회방지 강화 개정안 입장 채택(6.12)

- 6.12일,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CBAM 하류 제품 적용 확대 및 우회방지 관련 강화 개정안('25.12.17)*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입장(General Approach)을 채택
 - *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the extension of its scope to downstream goods and anti-circumvention measures

(참고) 동 개정안은 △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한 하류 제품 적용 확대(약 180개), △우회 방지 조치 강화, △시장 교란 발생 시 해당 품목의 한시적 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며, 현재 입법 진행* 중

* (경과) EU 집행위원회 제안('25.12.17) → EU 이사회 입장 초안 발표('26.3.27) → 유럽의회 환경위 입장 초안 채택(4.15) → EU 이사회 입장 채택(6.12)

-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제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일부 조항을 구체화·명확화
 - **(하류 제품 확대)**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품목을 유지하며 적용 대상 품목을 추가 확대하고, 향후 추가 하류 제품의 적용 확대 가능성을 매년 검토** 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보고
 - * 추가 품목 예시 : 냉장고, 소화기, 보일러·터빈, 자동차 부품(유리, 브레이크, 소음기 등), 톱날류 등
 - **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탄소누출,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
 - **(한시적 면제 조항(27a조) 구체화)** 대상 품목의 면제 발동 요건 및 적용 기간 설정

구분	내용
발동 요건	품목 수입 가격이 직전 10년 평균 대비 50% 초과 상승하고, 이 상승세가 6개월 이상 지속
면제 조건	1년 단위(calendar year)로 적용되며, 최대 2년까지 가능. 관련 위임법이 6.30일 이전 채택 되는 경우 당해 연도 적용, 6.30일 이후 채택 시 차년도부터 적용

- **(우회 방지 강화)** 유해 자원 셔플링*을 신규 우회 유형으로 명시하고 모니터링 강화
 - * Harmful resource shuffling : 기업이 탈탄소화 노력 없이 배출집약도가 낮은 제품만 EU에 선별적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제품은 규제 수위가 낮은 다른 국가로 수출하며 CBAM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 **(소비 후 스크랩 증빙)** 소비 후(post-consumer) 스크랩임을 주장하는 경우, 검증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 불충분 시 소비 전(pre-consumer) 스크랩으로 간주
 - * 소비 전 스크랩은 배출량 산정에 반영되나, 소비 후 스크랩은 제외
- 유럽의회가 '26.9월 본회의에서 입장을 확정하면, EU 이사회·집행위원회·유럽의회 간 3자 협의(trilogue)가 개시될 예정

• 자료 : EU 이사회([6.12](#))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doyeonkim@kotra.or.kr)

□ [배터리] EU, 역내 배터리셀 생산 확대 지원제도 'Battery Booster Facility' 도입

- EU 집행위원회는 「Battery Booster Facility」 신설 및 '26년 재정지원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결정문(Commission Decision)*을 채택하고, EU 관보 게재(6.11일)
 - * EU 집행위원회가 특정 정책·제도·재정지원의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상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채택하는 비입법적 결정으로, 일반 입법절차가 아닌 EU 관보 게재를 거쳐 효력 발생

- EU 집행위원회는 'Battery Booster Strategy'('25.12.16일 채택)에서 동 지원제도 신설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번 결정문을 통해 지원 대상·선정 방식·운영체계 등을 구체화·제도화함
- 지원 대상은 EEA 내 램프업 단계(ramp-up phase)의 전기차용 배터리셀 제조 프로젝트이며, 금융·기술 성숙도와 유럽 경제·공급망 기여도를 중심으로 선정
- 집행위원회는 '26년 EU ETS 혁신기금(Innovation Fund)에서 최대 15억 유로를 배정하고, 보조금이 아닌 무이자 대출 방식의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
- 대출은 최대 10년 만기로 운영되며, 지원액은 적격비용의 60%와 5억 유로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
- 생산 중단 후 12개월 이내에 배터리셀 생산을 EEA 역외에서 재개하거나 EEA 역외로 이전하는 경우, 계약상 제재 부과

• 자료 : EU 집행위원회(6.11)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inji.sim@kotra.or.kr)

□ [옵니버스] 소형 중견기업(SMC, small mid-cap) 대상 간소화 규정 합의(6.9)

- 6.9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옵니버스4' 입법 패키지의 일부로, 중소기업(SME)보다 크고 대기업보다는 작은 '소형 중견기업(SMC*)'에 대해 기존 SME 대상 규제 예외·간소화 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에 잠정 합의
- * Small mid-cap enterprises : 중소기업(SME)보다 크지만 대기업에는 미치지 않는 기업으로, 성장 과정에서 규제·행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업 범주
- SMC는 원칙적으로 직원 수 1,000명 미만인면서 매출 2억 유로 이하 또는 총자산 1억 7,2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
- 이번 합의에 따라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투자설명서 규정, 배터리 규정, F-gas 규정, 무역구제수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핵심주체 복원력 지침 등에 SMC 범주가 도입되고, 기존 SME 예외 조치가 일부 확대 적용
- (GDPR·투자설명서) 개인정보 처리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 GDPR상 기록 보관 의무가 완화되며, SMC가 주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SME 성장시장 접근과 간소화된 투자설명서 제출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됨
- (배터리) 배터리 규정상 실사 의무 면제 기준이 되는 매출 기준이 1억 5천만 유로에서 2억 유로로 상향되고, 공개 보고 빈도도 축소
- (무역구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등 무역구제 절차에서는 SME·SMC 헬프데스크 이용과 절차 간소화 혜택이 제공될 예정
- 이번 잠정 합의는 법률로 발효되기 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합의의 공식 채택을 거쳐야 하며, 공식 채택 후 EU 관보에 게재되면, 규정은 20일 뒤부터 적용되며, 지침의 경우 회원국은 15개월 이내에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 한편, 집행위원회는 신규 입법 발효 후 5년 이내 SMC 정의의 적용 현황을 검토할 예정

• 자료 : 유럽의회(6.9), EU 이사회(6.9)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강지숙(kjs@kotra.or.kr)

□ [디지털] EU, AI 생성 콘텐츠 표시·고지 행동강령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6.10일 AI 생성·조작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고지 기준에 관한 행동강령*을 발표 *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 동 행동강령은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가 EU AI법(AI Act, Regulation (EU) 2024/1689)*상 관련 투명성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실무 지침
- 이번 행동강령은 EU AI법 제50조 의무* 중 △AI 생성·조작 콘텐츠의 표시·탐지, △딥페이크 및 공익 사안 관련 텍스트의 AI 생성·조작 사실 공개에 관한 구체적 이행 방식을 제시
- * EU AI법 제50조는 AI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사실, AI 생성·조작 콘텐츠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며, 관련 의무는 '26.8.2일부터 적용 예정
- 행동강령에 따르면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는 AI 생성·조작 콘텐츠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콘텐츠의 AI 생성·조작 여부를 탐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한편 배포자는 딥페이크 또는 사람의 검토·편집 없이 공익 사안에 관해 대중 정보 제공 목적으로 게시되는 AI 생성·조작 텍스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현재 기업 서명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EU 집행위원회와 인공지능위원회(AI Board)가 동 강령을 적정한 것으로 승인하면 서명한 기업은 '26.8.2일부터 적용되는 관련 AI법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 가능

• 자료 : EU 집행위원회(6.10, 행동강령) 등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황준혁(jh10535@kotra.or.kr)

무역관 행사안내

□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웨비나

- 목적 : '26.12월 산림전용방지법(EUDR) 본격 적용에 앞서 제도 주요 내용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도 제고
- 일시 : '26.6.24(수) 한국(KST) 16:30~17:30 / 벨기에(CEST) 9:30~10:30
- 프로그램 (* 한국시간 기준, 참가신청 이메일로 추후 zoom 링크 전달 예정)

시 간	내 용	연 사
16:30~16:35 (5')	개회	
16:35~17:20 (45')	산림전용방지법(EUDR) 동향 및 유의사항	윤윤희 대리 KOTRA 브뤼셀무역관
17:20~17:30 (5')	마무리	KOTRA 브뤼셀무역관

- 참가신청 : 하단 링크 또는 QR 코드 스캔 통해 신청서 작성
- * 참가신청 링크 : <https://forms.gle/YpwWWVo43CZYTf137>
- 신청기한 : '26.6.23(화) 한국시간 18시
- 문의 : KOTRA 브뤼셀무역관 송지현 과장(jhsong_a@kotra.or.kr)





EU 무역구제조치 동향

* 발표일 클릭 시 EU 관보로 연결됩니다.

산업	품목	CN 코드	유형	조치	대상국	발표일
화학	알킬포스폰산 (Certain alkyl phosphonic acids and their sodium salts)	2931498060, 2931499090	반덤핑	잠정관세	중국	'26.5.13
기타	PET 스펠본드 (PET Spunbond)	5603139070, 56031420, 5603148070	반덤핑	잠정관세	중국	'26.5.13
철강	용접 철망 (Welded steel mesh)	731439, 731431, 73142090	반덤핑	조사개시	중국	'26.6.3
화학	지방족-방향족 코폴리에스테르 (Aliphatic-aromatic copolyesters (certain))	3907998050	반덤핑	조사개시	중국	'26.6.4
화학	강철 선반 (Bolted and boltless steel shelves)	9403208020, 9403991020	반덤핑	조사개시	중국	'26.6.10



EU 분야별 의견수렴

분야	내용	수렴 기간	링크
운송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AFIR) 개정 검토 관련 증거 수집	5.11~8.3	링크
공급망	핵심원자재법(CRM) 내 원자재센터 구축 위한 증거 수집	5.19~8.11	링크
순환경제	철강 제품 대상 에코디자인규정(ESPR) 위임법 제정위한 증거 수집	5.20~8.12	링크
보건	담배 규칙 개정 위한 증거 수집 및 의견 수렴	5.18~8.14	링크
자동차	Euro 7 전동화 차량 성능-브레이크 분진 규제 관련 시행령 초안 의견 수렴 ①전동화 차량 성능 형식승인 개정법, ②브레이크 분진 형식승인 시행령	5.27~6.24	개정법, 시행령
ESG	공급망 실사(CSDDD)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증거 수집	6.12~7.24	링크
해양	해양 연구·혁신 전략 마련 위한 증거 수집	6.15~8.2	링크
R&D	차기 Horizon Europe 공동사업체(JU) 개편 위한 증거 수집	6.16~7.14	링크



브뤼셀무역관 발간자료

(과거 보고서: [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경통리포트26-10	Eurosclerosis 2.0: EU 경제모델의 진단과 시사점	2026. 6월
글로벌이슈모니터링	EU 집행위원회, 「기술주권 패키지」 발표	2026. 6월
경통리포트26-9	유럽의회,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대응 조치안 최종 승인(5.19)	2026. 6월
경통리포트26-8	EU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 5월
경통리포트26-7	EU 주요 통상협정 현황 및 추진 동향	2026. 5월
경통리포트26-6	EU 에너지·원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운영 현황	2026. 5월
경통리포트26-5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4월